



제 7차 교육과정은 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로 공포된 제 7차 교육과정은 그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해인 2000년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1~2학년의 학생들에게 적용되었으며, 금년에는 그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초등학교는 3~4학년 학생들까지, 그리고 중학교는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경우는 금년에 새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내년인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것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2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 학생들에게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이와 같이 그 적용의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어 2004년도가 되면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들이 제 7차 교육과정의 체제하에 공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아래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그리고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이와 같은 인간상의 구현과 관련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은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2) 고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3)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4)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5)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6)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의 확립, 그리고 7)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정보 능력의 함양의 강조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제 7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훨씬 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한 개혁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보다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고교 2, 3학년에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 흥미, 필요에 보다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재량 활동을 신설, 확대함으로써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적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교과별 학습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를 조정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 활용 능력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혁적 성격이 강한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최근 부정적인 시각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은 제 7차 교육과정의 전체적 관점과 일반적인 성격에 관한 것도 있고, 제 7차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한 항목들에 대한 것들도 있다. 보다 일반적인 비판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①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예상하고 만든 교육과정이므로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 ② 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적 논리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적 논리로 구성된 것으로서 교육적 불평등의 양극화 현상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③ 제 7차 교육과정은 철폐되거나 전면 수정, 고시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있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비판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로는 ①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을 전국적

으로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80%의 열등생에게 좌절감을 주고 20%의 우수생을 위한 사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라는 것 ②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신분 불안을 크게 할 것이라는 것 ③ 현재의 여건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고교 2, 3학년에서의 학생 선택 교육과정의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것 ④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교급별 특수성과 교사들의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것 ⑤ 재량활동의 도입으로 단위 시간당 가르쳐야 할 교과 교육 내용의 양과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었으며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타당한 것들도 있고, 타당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오해에 기인한 것들도 있고,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관점이 극단적으로 개입된 곡해에서 연유된 것들도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전제해서만 개발된 것은 아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소득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시행이 가능하도록 구안된 '융통성이 높은 교육과정'이라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시장 경제의 논리하에 개발되어 교육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키는 교육과정은 결코 아니다. 비록 제 7차 교육과정이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수업에서의 개인차의 강조는 잘 하는 학생을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다 잘 하게 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리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불평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운영의 방식 여하에 따라 그 적극적 기능, 즉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면서도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억제, 감축하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과정 체제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은 우리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체제로서 철폐, 유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교육과정인 것이다. 물론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문제들은 시행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업)능력의 개인차에 따라 학습 집단을 다르게 편성한다는 점에서 '우열반 편성' 과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열반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목적이 다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나 우열반은 대개의 경우 각 학교가 자기 학교의 상급학교(대개의 경우 대학) 진학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된 제도이다. 둘째, 학습 집단 구성의 빈도와 기준이 다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집단의 구성 시기나 방법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학기 또는 분기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집단은 다르게 편성된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보다 좀더 빈번하게 학습 집단을 재편성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이동이 빈번하고 유동적이다. 그리고 학생의 성적(성취 수준)이 집단 배치의 기본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기준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이다. 그리하여 성적이 낮은 학생도 만약 학생이나 부모가 강하게 원한다면 상위 수준의 학습 집단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열반의 반 편성 원칙은 보다 경직적이고 고정적이다. 대개의 경우 우열반 제도에서 한번 편성된 반은 오래 계속되고 별로 변동이 없다. 그리

고 성적(석차)이 반 편성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것 이외의 다른 기준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운영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한 단계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정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보충 과정' 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내용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열반 제도에서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가르치는 교육내용이 다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같은 학년이어서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내용을 배우게 되어 있다. 즉, 고 1이어도 실력 수준이 중 2라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내용을, 즉 자기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내용을 배우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열반 제도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게 되어 있다. 우반은 교과서 이외의 다른 참고서나 심화 내용을 더 가르치고, 열반은 교과서의 내용을 위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교과서를 위주로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에 대한 학교 전체의 기본적인 태도가 다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역량을 가능한 한 낮은 단계에 속한 학생들의 학업 지도에 집중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우수한 교사를 낮은 단계 집단에 배치하며, 그러한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학교 단위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열반 제도는 학교의 노력을 우반에 집중하고, 열반 학생들은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과 우열반 운영은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우열반 제도는 비교육적인

“

학습이 최대로 발현되는 상황은 학습의 대상에 집중, 몰두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학생들은 공부의 진정한 기쁨과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바로 이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구현할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제도로서 마땅히 사라져야 했던 과거의 한 교육 유물이었다.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커다란 착오인 것이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을 전공한 교사들은 가르칠 과목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 타당하지 않은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교과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을 도입하게 된 취지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학습은 학생이 자기의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자기의 능력 수준에 맞는 것, 그리고 자기의 적성이나 흥미에 부합되는 것을 배울 때 극대화된다. 즉, 학습은 학습 내용이 학생의 적성, 흥미, 능력, 필요에 부합될 때 최대로 발생하게 된다. 학습이 최대로 발현되는 상황은 학습의 대상에 집중, 몰두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학생들은 공부의 진정한 기쁨과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구현할 것을 목적으로 도

입되었다. 한편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6차 개정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지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 동안 교과목 편제의 구성은 교육부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던 것이 6차 개정에서 개정의 기본 방침 중의 하나로서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지방화'가 설정되고 이 방침에 따라 편제 구성의 상당 정도가 시·도 교육청에 위임되었다. 이번 7차 개정에서는 편제 구성의 권리를 상당 정도 학교와 학생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지방화라는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적인 방침을 보다 내실 있게 추구하려고 하였다.

학생 선택 교육과정의 도입이 이와 같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택 교육과정 도입과 교사의 안정적 지위 확보와의 관계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지위가 안정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직업적 안정감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나 교육의 질의 고양과 관련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교사의 신분 안정이 교육의 가치 추구나 질 고양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교사의 신분 안정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사의 신분 문제는 교육의 질 고양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교육의 발

전을 위하여 교사의 신분상의 불안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분의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정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학생 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하더라도 실제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은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가 선택과목으로 설정해야 하는 과목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으며, 여건이 전혀 허락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선택과목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선택 과목 제도의 운영이 교사의 신분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은 실제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가능성이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광범한 부진공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전공 과목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부진공 과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의 직업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여건하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 10년간의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고등학교 2, 3학년에서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의 결핍의 결과이다.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방식은 유연하다. 어느 하나의 정형화된 고정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정책이 초기의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시행되어야만 한다

는 완벽주의적 강박 관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수준별 교육과정 중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학년 안에 3개의 단계를 운영할 수도 있고, 2개의 단계를 운영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1개의 단계, 즉 단계를 전혀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물론 마지막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단계형이라고 간주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까지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수준별 교육과정은 신축성 있게 구안된 장치인 것이다(어떤 이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제도가 너무나 허술한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한 학년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개인차는 대단히 크므로 보다 동질적인 학습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계를 많이 설정할수록 운영은 복잡하고 어려워지며, 교사와 교실 수의 확충 등 보다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는 무조건 단계 수를 많이 할 수는 없으며, 특정 단계 수를 확일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각 학교의 현실 여건을 최대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수준의 단계 수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단계형에서는 단계의 수를 현장 학교가 자신의 여건(물리적, 심리적)에 따라 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하도록 그 한계를 열어 놓은 것이다. 운영상의 이러한 유연성은 2~3학년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 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현재의 여건보다도 더 못한 과거에도 뜻있는 학교에 의해서 이미 시행해 온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수준에

서도 수준별 교육과정은 시행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다. 물론 여건이 개선되면 개선되는 정도만큼 더 내실 있게, 더 높은 수준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10년 간에 걸치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교급별 특성이 사라지고 교사의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본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구분이 폐지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사들을 그들의 전공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다른 학교급에 배치하게 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본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학교급간 존재하는 교육내용상의 중복이나 비약 등 교육과정 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 그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재량활동의 도입으로 교과 학습 시간이 부분적으로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시간의 축소에 따르는 내용의 축소가 잘 시행되지 않은 교과와 경우 교육내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재량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 주체의 선정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재량활동의 도입에 따르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제 7차 교육과정의 철폐나 유보를 요구해야

할 정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행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 7차 교육과정은 철폐 또는 유보되어야 할 교육과정이 아니라 현장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그리고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구체적인 후속 작업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교육과정인 것이다. 그 후속 작업 중의 하나가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는 일이다. **한글**

허경철

서울사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교육개발원 연구본부장,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과정 특별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 연구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과정 해설』, 『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현장교육연구법』, 『사고력 개발』 등이 있다.